

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

2023. 9.

국민제안심사위원회

1 그간 경과

- '23.6.5, 「국민제안 심사위원회」는 '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' 관련 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
- '23.8.1~8.21 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內 '국민참여토론'을 통해 2,213건의 찬반의사 및 세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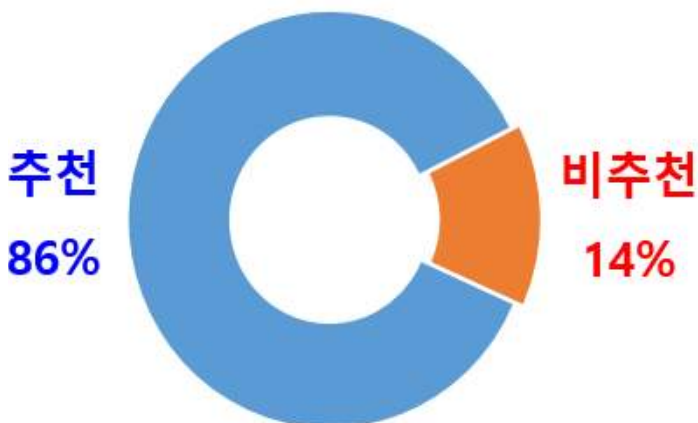
※ 「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」 관련 국민참여토론 개요

- [주제] 자동차세 산정,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의 적절성 및 보다 합리적인 방안
- [방식] 대통령실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주제에 대한 ▲추천/비추천 투표 ▲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

2 의견수렴 주요내용

- (찬반투표) 총 투표수 1,693표 중 86%(1,454표)가 현행 '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'에 찬성

< 찬반의견 (투표; 1,693표) >



< 자유토론 (댓글; 2,213건*) >



* 댓글의 수는 그간 토론(1,903~131,283건)에 비해 많지 않으나, 단순 찬반이 아닌 향후 정책 방향,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댓글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제기됨

- (자유토론) ▲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 ▲현행 유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▲기타 제도 개선 의견 등 총 2,213건의 다양한 의견 제기

① 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 의견은 74%(1,631건) 차지

- 시대·환경의 변화,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
-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▲차량가액, ▲차량가액 + 다른 기준(운행거리, 배기량, 온실가스 배출량 등), ▲운행거리 순으로 제시된 가운데, 차량무게, 차량크기, 연비 등 다양한 요소가 언급
- 또한, ▲해외 사례,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 ▲배기량 기준은 개선하되,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세액 공제, 보조금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

② 현행 유지 의견은 12%(267건) 차지

-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우려, 자동차세 부담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배기량 기준 개선에 반대
- 반대 근거로는, ▲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 ▲배기량 기준은 유지하면서 보완방안 마련 적절 ▲세금부담 증가 우려 ▲現 제도가 합리적 순으로 제시

③ 기타 의견은 14%(315건) 차지

- ▲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필요 ▲중·대형차가 필요한 다자녀가구 혜택 부여 ▲복지 사각지대 부분은 개선하되 자동차세는 현행 유지 ▲자동차세 폐지 ▲복지 제도에서 자동차를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 필요 등 다양한 의견 제기

- 대통령실 「국민제안 심사위원회」는 ‘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’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,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함
 - 기초생활 보장, 장애인 복지,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·목적, 시대·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
 -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,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 또는 추가·보완할 것
 - 「국민참여토론」 과정에서 제기된 ▲친환경차 장려 ▲다자녀 가정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하고, 관계부처, 전문가, 국내외 이해관계자, 국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